

뉴스초점

18년 끌어온 「원전센터」 로드맵은?

Who Knows the Final Destination of a Roadmap Siting the Korea RDF Project Center Struggled for 18 Years?*



글 / 朱昇煥
(Choo, Seung Hwan)
방사선관리기술사, SRI, 공학박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E-mail: kewyoung@hotmail.com

‘원전센터유치’ 흔들려선 안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달 6월 24일 강현욱 전북지사를 만났다. 전라북도 보도 자료(1)에 따르면, 두 사람은 거기서 두통거리 국책사업인 ‘원전센터’ 부지 선정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한쪽은 사업추진 주체의 장이요, 다른 한쪽은 부안사태가 일어났던 광역단체의 장이라 둘 사이에서 오간 대담들은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뉴스 거리였다. 하지만, 중앙일간지들은 애써 보도를 자제했다. “참새들은 방앗간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둘은 하소연 하듯, 각자 그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풀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보도자료 틈새에서 느낄 낚새는 문제로 안겨진다.

보통사람들은 정책사업 시행 공고는 법에 따라 시행됨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가 공고한 사업은 정부 임의로 규약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위력을 갖는다. 중앙일간지들은 지금 <‘12개 위원회’가 정책 사령탑>이라 보도했다(2).

거기에서 원전센터 후보지의 선정사업은 참여정부 이전에 조직된 ‘지속가능발전 국정과제 자문위원회’소관으로 돼있다. 하지만, 원전센터 건립사업에는 근본 바탕이

뒤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회 역할극”

야누스의 얼굴처럼,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두 모습을 지닌다. 전력이나 동력으로 쓰일 때면, 그의 한쪽 얼굴인 수기능만 보이고, 친환경단체의 눈으로 보면, 방사능 아니면 이산화탄소 등을 양산할 다른 쪽의 역기능만 보인다. 필자는 본지와 한 전문지에 에너지 사업을 “거대 패션산업”(4)으로 정의했던 적도 있었다.

우리 에너지 정책에서 ‘역할극’은 연속 공연될 것이다. 그런 정황은 중앙일보 대담 프로그램(5)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거기에 한 단체의 대표로 참석한 한 선봉장은 자신 있게 원전센터 정부사업추체를 향해, “어차피 부안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를 소리친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속보>기사에 놀란 가슴, 전혀 믿기지 않는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센터」유치를 털어놓아야 한다. 놀란 가슴속 바닥에 다 의심을 깔고 보면,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회적인 갈등들, 예컨대 사태산 사태를 포함한, 사태 홍수들은 어떤 특정 성향 집단이 철저히 준비했던 “사회 역할극” (3)들이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RDF(Radwaste Disposal Facility) Project Center” : ‘원전센터’

뉴스초점

“원전센터 유치를 청원한 용기와 결단”

‘원전센터’란, 작년에 정부가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쓰레기를 가둘 시설물들이 있는 장소를 「원전수거물센터」로 작명했고, 이것을 줄인 이름이다. 지난 18년 동안이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대가로 지불했음에도, 아직도 그 사업은 오리무중이다.

안면도에서 시작된 그 사업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공연장소가 굴업도로 옮겨졌고, 동해안의 몇 개 군들(경북 영일군, 영덕군 그리고 울진군 등)에서 공연장 설치를 넘보다가 주민들의 김새가 예사롭지 않자, 중단했다. 최근에 부안군 위도에서 공연을 펼치다 불안사태가 일어나면서 다시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다.

그 사태로 말미암아 그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여 재공모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금년, 정부가 재공모한 로드맵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중앙일간지들은 지난 5월 31일 끝난 제1단계의 추진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제2단계는 오는 9월 15일까지 지자체장이 예비신청을 해야 하고, 제3단계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여 찬성을 얻게 되면, 금년 말까지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지막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

제1단계 청원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해온 것과는 달리 10개 후보지역들(경북 울진군 기성면, 근남면 그리고 북면 등 3곳, 전북 고창군 해리면, 군산시 소룡동 그리고 옥도면 등 3곳, 전남 영광군 홍농읍, 완도군 생일면 그리고 장흥군 용산면 등 3곳, 끝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1곳 등)이 청원 신청을 했다.

청원을 미처하지 못했던 다른 지역들도 청원할 기회를 주고 있긴 해도, 부안군 위도가 본-신청(위범벽 모순 덩어리이므로 필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새로 청원된 10군데가 정부의 사업 추진 팀에 희망을 안겨 준다.

그들 중, 몇 곳들은 작년 초 1차 공모 때, 정부가 미리 예비 후보지로 지정했던 4개 지역들 중의 일부도 포함됐다. 작

년 공모 때, 정부가 그들에게는 신청에서 우선권을 주었지만 그들은 공모에 응해오지 않았다. 오직 부안군 단독으로, 거기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심받을 소지를 안고, 신청하여 ‘부안사태’란 엄청난 난리를 겪었다.

그 사태 이후, 원전센터 건립지의 공모에 관한 정책의 미비점들도 대부분 다시 손질된바 있다. 금년, 새로운 도구로 정비된 재공모의 향해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 지금도 순항이 계속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언제 또 다른 격랑의 위기가 닥쳐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필자는 한 원자력 전문지에, “누가 뭐래도 그 배는 금년에 정부 계획대로 목적지에 정박할 것임”을 감히 예단했던 적이 있다(4). 필자의 성급한 예단은 거기서 분명한 정황(情況)들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옥상옥의 먹구름 소식

지금도 정부조직의 가상 옥들은 무허가 건물처럼, 마구잡이로 지어지고 있다. 원전센터 재공고 이후, 지난 5월 27일, 산자부는 에너지정책을 난도질할 11명의 【에너지정책간담회 동포럼】을 조직했고, 그 조직의 민간부문 초대 위원장에 어느 특정인을 임명했다. 그는 모든 국가정책사업 현장의 전면에서 투사처럼 싸워왔던 선봉장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원전 자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기를 원했고, 앞으로 원전센터 건설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원전도 자연 폐쇄된다는 논리를 폈다는 그런 점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산자부는 【공동기구】란 또 다른 옥상옥을 늦어도 오는 8월 15일까지 만들고, 그 기구의 결정에 따라 원전센터사업을 계속 추진해 갈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시켜버릴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한다. 급조된 그 【공동기구】의 역할이란, 이미 공고된 로드맵 중, 제1단계가 끝났음에도, 공고 이후에 원전센터 건립이 그렇게 급한 사실인지를 다시 실사하겠다는 발상만을 하고 있다.

제2단계 향하는 순풍에 돛달았다. 급작스러운 돌풍과 먹구름의 시샘은 사업의 항해를 가로막는다. 모르긴 하겠지만, 원전센터의 미분방정식을 풀 조건들은 나올 것이다. 반핵단체와 친환경단체들은 당초 예측했던 작전의 잘못을 사후에 감지했을 터이고, 작전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주민청원이 없을 것이란 잘못된 판단에 허가 짚렸음이 분명하다.

무소불위

저들은 이 장관이 마련한 원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고 한다.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 장관을 뒤따르면서 그를 압박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아주 혼란스럽다. 다시 들먹이기조차도 역겹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주도로 이어졌던, 일련의 원전센터 후보지 선정과 관련돼 촉발됐던 안면도, 굴업도, 부안, 그리고 이어질 다음 xx 사태들과 같은 “역할극”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만일 용납한다면, 환경단체들의 저항과는 견줄 수 없을,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사태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투사적 성향의 참여연대가 있었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NGO 단체로서 저들의 활동무대였다. 그리고 환경보호관 위장 간판을 내걸고 유·무형 전리품을 노려왔다. 어느 때고 원한다면, 저들은 정부의 정책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강력한 파위를 가지고 활동한다.

20억 달러와 2조 원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미국은 불꽃 튀는 전쟁터의 살육전에서 기선을 잡으려고 야심에 찬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뉴욕 시의 한 섬인 맨해튼에 미국 육군성 산하의 한 공병 사단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핵폭탄을 만들 비밀 사업 계획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미국 공병대가 주도하였고, 그 사업의 이름을 “맨해튼 공병 지구(Manhattan Engineer District)”로 위장했다. 전 후,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맨해튼프로젝트(Manhattan Project)”가 바로 그 사업의 공식 명칭이었다(4).

인류가 핵반응 현상을 발견하고, 처음 원자핵의 연쇄반응 시험에 성공한지, 19년의 긴 세월도 아닌, 겨우 19개월 만에 “리틀 보이”란 애칭의 첫 핵폭탄을 탄생시켰다. 그 프로젝트에 쓰인 돈은 약 20억 달러에 이른다. 당시의 돈 가치로는 엄청난 차이가 날 테지만, 우연히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원전센터를 유치한 지자체의 지역 발전을 위해 약 2조 원 규모를 투자할 돈과 수처로 비슷한 액수였다. 많은 과학자들은 애국심으로 그 프로젝트에 자진 참여했다. 그곳의 모든 과학자들은 자기 맡은 분야에서 각자 애국하는 심정으로 혼연 일체가 돼 기적 같은 일을 성취시켰다.

우리의 원전센터 부지 선정사업에 거의 18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 한 것과는 아주 대조를 이룬다. 아직도 우리 일은 부끄럽게도 긴 세월 동안 국력만 허공으로 날려 보내고 말았다. 원전센터 부지의 선정에만 투자할 돈이 왜 핵폭탄을 만드는 예산만큼 들게 되고, 걸린 기간도 12 배나 더 길게 끌고 가야 하는지, 그런 애타는 문제를 책임질 기성세대가 풀 수 없던 딱한 사정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납득시킬 구실을 마련해 놓았는가?

이젠, 어느 정당이든, 혹은 반핵단체나 환경단체이든 엄청난 국력 소모적인 결사 반대운동만은 접을 때가 온 것임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다짐하자.

“어차피 부안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원전센터를 청원했던 일부의 순진한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믿지 못할 정부 에너지정책에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감지된다. 청원지역들의 반핵단체 활동들은 더 세련된 투사적 모습으로 양손(정부와 현장)에 다시 칼날을 세우고 등장했다. 중앙의 어느 중심 단체의 지시를 받기라도 하듯,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문을 열었다. 저들은 전처럼, 섬뜩한 얘기들을 서슴지 않는다.

더구나 원전센터를 고향에 유치하려고 미쳐버린 필자만

뉴스초점

외롭고, 가소로울 뿐이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총-사령관인 장관도 저들의 눈치를 살피야 한다면,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의 살기충천하게 내뱉은“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지금 유치신청을 전국의 몇 군데에서 받은 관계없이 현재의 추진 방식은 어차피 부안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5)에 전적으로 그들과 맞서 싸울 길은 없어 보인다.

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꼭 필요한 정책사업의 기술적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의 머리와 손발로 올바르게 판단된 자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자의적 상황판단에 따르는 정치적 결단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6).

원자력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절규한다. 방사성 쓰레기들이 폭발한다고 주장할 만큼, 원자력을 모르는 저들에게, 언제까지 원자력을 맡겨놓아야 할 것인가?

참고자료

1. 새전북신문/2004.06.24. <속보> 《원전센터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모절차 진행 여부는 앞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기구의 논의 결과에 따르게 됐다.
2. 중앙일보, “위원회 정부 시대”, 2004.07.13., 05쪽
3. 최광식,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역할극 도입”, 원자력산업 2003.07., 15쪽
4. 주승환, “원자력발전에 대한 '악업(惡業)' 이란 시각은 잘못”, 전력경제, 2004.02.16, 3쪽
5. 정진홍, 「논쟁과 대안」9. “원전문제 해법은 없나”, 중앙일보 2004.06.08., 25쪽
6. 주승환, “원전센터 항로에 먹구름”, 원자력산업 2004.07(인쇄 중).

(원고 접수일 2004. 7. 19)

